

정부, 양대노총 지원 예산 줄여 MZ노조 등 지원

노동부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회계자료 미제출 지원사업 배제 지원 대상 '근로자 협의체'로 확대

정부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며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 있게 운영돼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 등이 언급한 내용을 관련 사업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노동부의 올해 노동단체 지원 사업 예산은 44억 원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1521억 원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가 총 1344억 원

을, 고용노동부가 177억 원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지원 사업 대상 기관을 기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불과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를 차지하는 노조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원 대상 확대도 비정규직과 플랫폼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예산(44억 원)의 절반(22억 원)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최근 주목받는 근로자협의체, MZ노동조합 등 새로운 노동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21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바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검증할 방침이다.

검증 결과 부적절하게 사용했거나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 사업 중 큰 부분을 차지했던 노조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했다.

그 대신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 노조 미조직 근로자 간 커뮤니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황교안·안철수·김기현·천하람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3일 오후 강원 춘천군 흥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대표 지지율 김기현 44.0%·안철수 22.6%

리얼미터 조사... 천하람 15.6%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38.1%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에서 김기현 후보가 40% 이상 지지율로 4명의 후보 중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립을 의뢰해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4명(국민의힘 지지층 4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4.0%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22.6%), 천하람 후보(15.6%), 황교안 후보(14.6%) 등의 순이었다.

김 후보는 리얼미터의 직전 여론조사(2월 6~7일)보다 1.3%p포인트(p) 지지율이 하락했으나 1위를 지켰다. 안 후보는 7.8%p 떨어졌고, 천 후

보와 황 후보는 각각 6.2%p, 7.6%p 상승했다.

당선 가능성의 경우 김 후보가 52.6%로 과반을 차지했고, 안 후보(24.2%), 천 후보(9.4%), 황 후보(8.0%)가 뒤를 이었다.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김 후보 50.1%, 안 후보 37.6%로 김 후보가 역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위원 지지도에서는 민영삼 후보가 14.8%로 1위였고, 김재원(13.6%)·조수진(13.1%) 후보가 10%를 넘겼다. 다음으로는 태영호(9.2%), 김병민(9.1%), 김용태(8.7%), 허은아(6.4%), 정미경(6.0%) 등의 순이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는 장예찬(43.7%), 김기람(9.8%), 이기인(7.8%), 김정식(6.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평가 38.1%, 부정평가 59.8%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3월 임시국회 6일 개회

국힘, 소집요구서 제출

국민의힘은 23일 3월 임시국회 개회일을 내달 6일로 하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미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외 114인 명의로 제출된 소집요구서에서 3월 6일 임시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3월 5일까지 며칠간은 필요하면 상임위를 열어 충분히 민생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빈틈없이 3월 1일부터 곧바로 열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구실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3월 임시국회도 열 수 없어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윤 대통령 "올 수출 6850억 달러 달성 할 것"

"여건 어렵지만...0.2% 증가 목표"

"원전·방위산업 등 집중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올해 수출액 목표를 전년 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자며 이러한 목표를 내놓았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회의는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장·차관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간 기업 임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이 둔화하고 무역 적자가 지속하면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며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부처별도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수출·투자 책임관' (1급)을 통한 이행 상황의 점검·관리에 나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수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함께 윈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 애로 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임을 자임하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약속했다.

원전, 방위산업, 해외 건설, 농수산 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까지 연계해 고부가 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2023년 수출 여건 및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산업부)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수출 확대 전략(농식품부·해수부) ▲K-콘텐츠 수출 전략(문화부)을 각각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검찰, 기동민·이수진 의원 기소... '김봉현 금품수수' 혐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라이프' 핵심 인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57) 의원과 이수진(54) 의원(비례대표)을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당의 김영춘(61) 전 의원과 김모(55)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만 원을,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정치자금 5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 예비후보 김씨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이들 정치인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6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언론인 출신 이모(6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6년 초 집중된 이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함에 따라 기 의

원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현직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등 신병확보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했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이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4월 체포된 뒤 "2016년 기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16일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육중 입장문'에서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폭로하고 검사를 술집대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연합뉴스

